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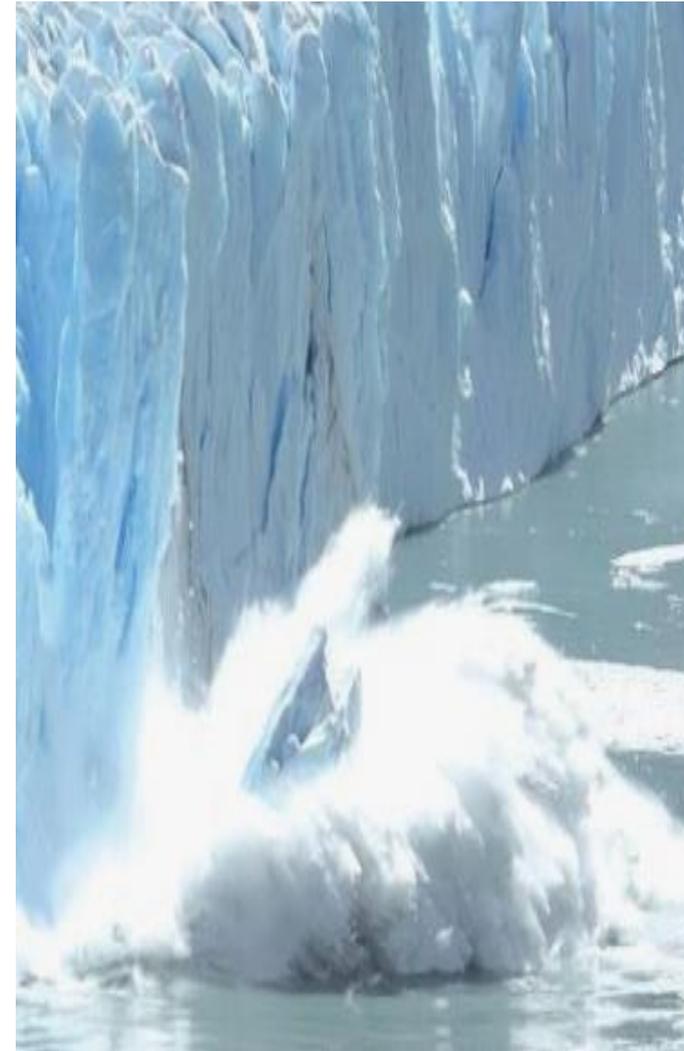


에너지 전환을 통한 혁신·선도국가로의 이행

2024. 1. 18 .

송재도

- ◆ 1.5°C 온도상승 억제 임계치 임박 & 빈번한 기후 재난
 -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.09°C 상승
- ◆ 미래 세대의 불안감(세계 1만명 청년 조사)
 - 58% think humanity is doomed
 - 75% think the future is frightening
 - 39% are hesitant to have children
- ◆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(8.1%) OECD 최 하위
 - 세계 평균 30% : 독일 42%(30년 80%), 중국 31%, 일본 22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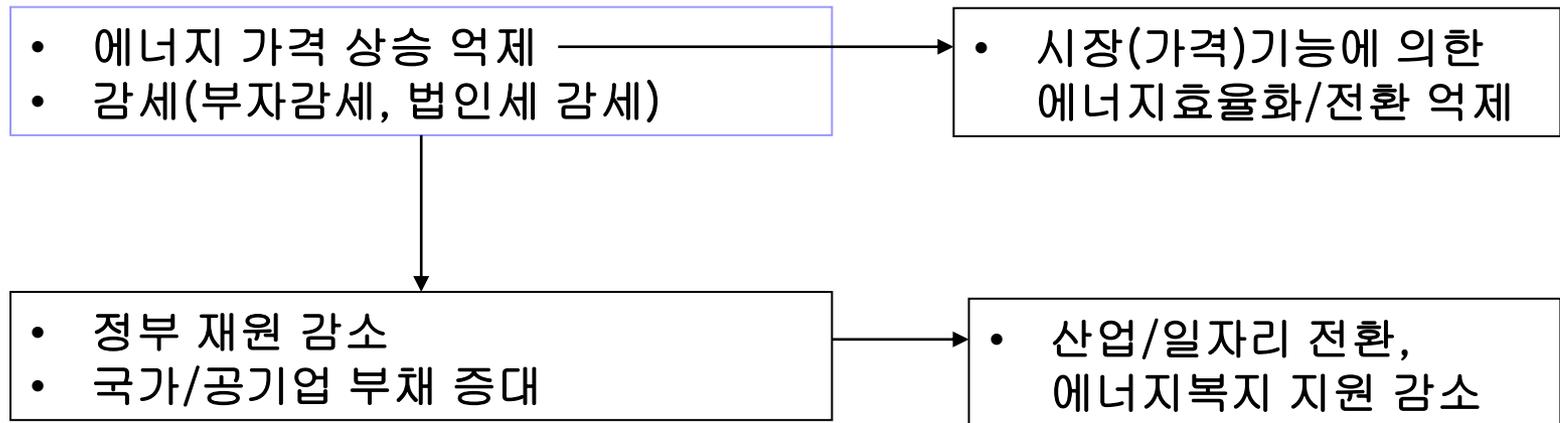
- ◆ 에너지전환은 경제 혁신의 방향 : 도덕적 책임 or 경제와 자본의 문제
 - 각국의 기후정책이 새로운 글로벌 산업/통상질서 규범화, 선진국들의 무역장벽 최고 명분은 탄소중립
 - RE100, ESG투자원칙,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
 - EU Green Deal Package, 미국 IRA, 중국 3060쌍탄소전략 등 :
에너지전환은 에너지안보, 일자리 창출, 국가경쟁력 유지의 핵심 수단
 - 경제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 : 탄소배출 수반 생산과정, 제품의 시장경쟁력 유지 가능성
 - 2028년경, 화석연료 문명은 붕괴한다...전기 조명 3%를 차지했을 때 가스 조명의 수요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다 (제러미 리프킨)

◆ 에너지전환 정책의 퇴행

- 2030년 신재생 발전량 비중 : 30.2% → 21.6%
- 탄소 감축은 차기 정부로 :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(23.4월)
 - 18년 대비 23년 92.3%(-7.6%), 26년 87.8%(-12.2%), 30년 63.6%(-36.4%)

→ 민간/시장 주도? : 시장에 주는 Signal은?

- 에너지전환 재정지원/투자확대 : 재원은?



◆ 핵심 과제

- ① 에너지 가격 정상화와 에너지 복지 강화
- ② 재생에너지 확산 및 ESG 인프라 구축
- ③ 탈탄소 산업경쟁력 강화
- ④ 정책 효율화 : 에너지전환 거버넌스 및 전력산업 구조

→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 및 혁신·선도국가로의 이행

◆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 : 국민 부담 or 미래 투자

- 시장 기반 에너지 효율화 유인 제공

- 자원 확보 : 산업경쟁력/일자리 확보, 에너지 복지 강화

- 배출권 거래제 정상화 :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(90% 이상) 감소 및 할당량 감소

- 배출권 거래제 제외 분야에 대한 탄소세 부과

◆ 서민 부담의 경감을 위한 선택적 에너지 복지의 강화
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 영세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비용 지원

- 정의로운 전환 :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직·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/지역 노동자 지원

- 서민 에너지 전환 지원 : 에너지 효율 건축물, 고효율 에너지 설비 포설 지원제도 강화

- 기후 재난에 따른 서민생활의 불안정성 가중에 대응한 정부 대응력을 확충 및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강화

◆ 가칭 “햇빛·바람 패키지” 입법화

- 재생에너지 30년 30%, 50년 70% 목표 (현재 30년 21.6%, 36년 30.6% 목표)

→ 지원 정책

- 발전사업자들의 RPS(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) 비율 확대
- 신재생 계획입지제도, 인허가 원스톱 지원
- 에너지 분권체계 강화, 주민소득형/영농형 재생에너지 특별법 제정
- 전력망 선제 투자

◆ 탄소발자국 추적 시스템을 포함한 ESG 회계를 국가 경제 인프라로 구축

- RE100, CBAM, ESG금융 등 국제적 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 인프라
-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시장 기반 지원체계 형성 : 정책적 지원 방식의 효율화 및 소비자 선택권 활용

→ ESG 회계 관행 조기 정착 : 상장사들의 공시 기준 강화 등 관련 제도 정비

→ 중소기업 ESG 회계, 탄소발자국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

◆ 탈탄소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

- 에너지전환 관련 보호주의적 국제 무역질서 : 한국의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
 - 탄소중립 기술 분야의 산업 주도권 경쟁 : 대대적 보조금, 무역장벽 (CBAM, IRA, EU Green Deal Package)
- 에너지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
- 에너지 안보 : 에너지 해외 의존도 및 가격 변동성 대응

◆ 정부주도 산업정책의 강화

- 전기차, 배터리, 수소, CCUS 등 핵심 탄소중립 산업 R&D 지원 확대
- 탄소중립 산업 투자/소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
 - 지급 조건에 ① 국내 제품·부품 사용 요건, ② 적정 임금, 견습 요건과 같은 고용 조건 포함
- 자발적 탄소시장(VCM) 확산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

◆ 기후 에너지부 신설

-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후위기 대응, 경제정책 등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기후·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
 -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탈탄소 전환 지원, 녹색 신산업·일자리 창출, 재생에너지 인허가 과정 전반의 지원 등

◆ 에너지산업(전력, 가스, 석유 등)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규제기관 신설 및 전문성 확보

- 정치권,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적인 요금, 산업규제 기능

Thank you

Q&A